

〈추진부서〉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(031-8008-4105)

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〈억울한 소매인 영업정지처분 면제〉

• 개선배경

- 현행 담배사업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음.
- 위반행위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매인에게 지나친 처분으로 개선이 필요함

〈피해사례〉 편의점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으나, 경찰조사 시 위조한 신분증으로 밝혀져 소매업주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음

▶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면제 건의

※ 관련규정 : 담배사업법 제17조,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

• 개선내용

개 선 전	개 선 후
-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2개월간, 2차 3개월간 영업정지	-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면제

• 추진과정

- 청소년 담배 판매(신분증 위조 등) 과도한 행정처분 규제 인지·검토 : '19. 4월 ~ 9월
- 국무조정실(규제신문고과) 담배사업법 개정 건의 : '19. 9. 10.
- 기획재정부(출자관리과) '중장기 검토' 의견 회신 : '19. 10. 2.
- 수퍼마켓 소상공인 청소년 담배 판매 규제애로 현장 조사 : '19. 10. 16.
- 규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「One-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」 : '19. 10. 30.
 - 피해마트 방문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구
- 「민관합동 민생규제협의체」 개최하여 청소년 담배구입 방지 위한 법률 개정 요청 (국무조정실 등 참석) : '19. 11. 26
- 기획재정부(출자관리과) '수용' 의견 회신 : '20. 3. 24.
-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개정 : '20. 3. 31 / '20. 6. 24

• 개선효과

- 편의점 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및 불필요한 행정소송·심판 소요비용 절감
- 청소년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자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져 청소년 탈선 방지 효과



• 개정법령(담배사업법 제17조)

개 선 전	개 선 후
<p>제17조(소매인지정의 취소 등)</p> <p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제17조(소매인지정의 취소 등)</p> <p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[개정 2020.3.31] [시행일 2020.7.1]</p>